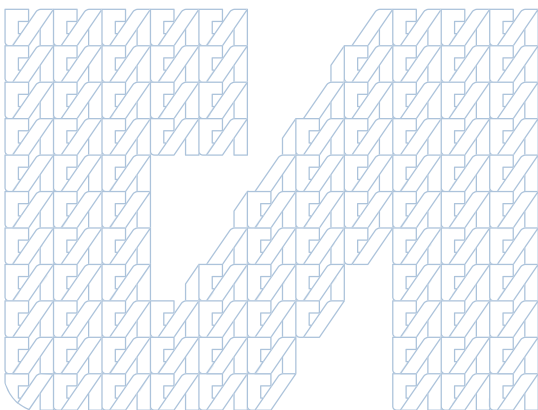


#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참여의식 극대화 도구 개발

유병선



정책연구 2022-35

#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참여의식 극대화 도구 개발

유 병 선



정책연구 2022-35

##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참여의식 극대화 도구 개발

발행인 정 재 근

발행일 2022년 10월 31일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 37(문지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0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 갓피플 TEL 042-223-002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자치특별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 요약

- 본 연구는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정치참여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까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함
- 2장에서는 주민참여의 발전과정, 주민참여예산제, 새정부의 주민참여 정책 기조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봄
- 3장에서는 주민참여 교육 현황을 정리함. 주민교육의 유형과 특징을 정리하고, 주민참여예산제 교육과정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의 운영과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 또한 도시재생 교육과 주민자치 교육의 핵심 내용을 정리함
- 4장에서는 전문가 자문과 선행연구를 통해 주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제도운영과 교육 콘텐츠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봄
- 정책 제안으로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주민교육 제도 운영 방안으로는 주민들의 정책결정 권한 강화, 주민참여제도의 네트워크화,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주민교육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지역 리더 양성 교육 과정의 실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신정부 출범에 따라 민간 자율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 부응하는 주민 참여 제도나 정책 개선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제도 및 정책 실현을 위한 새로운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임
  
- 이는 자율역량,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자는 취지임. 일자리, 재난, 교통 등과 같이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갖는 분야에 대하여 영역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주민참여 제도 중심의 교육진행과는 달리 시정의 영역별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정책설명회 개최를 통한 주민참여 유도과 동시에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제도를 장기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함.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주민들이 성인이 되기 전부터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이를 실천하는 활동이 몸에 체득화되어 있을 경우 가능하기 때문임

# 차 례

|                           |    |
|---------------------------|----|
| 1장 서론 .....               | 3  |
|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 3  |
| 1. 연구의 필요성 .....          | 3  |
| 2. 연구목적 .....             | 4  |
| 2절. 연구방법 .....            | 5  |
| 3절. 선행연구 및 차별성 .....      | 6  |
| <br>                      |    |
| 2장 주민참여 이론과 제도 .....      | 11 |
| 1절. 주민참여의 발전과정 .....      | 11 |
| 1. 지방정치와 주민참여 .....       | 11 |
| 2.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유형 .....    | 12 |
| 3. 한국의 주민참여 전개과정 .....    | 13 |
| 2절. 주민참여예산제 .....         | 16 |
| 3절. 새정부의 주민참여 정책 기조 ..... | 19 |
| 1. 주민자치 관련 정책방향 .....     | 19 |
| 2.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방향 .....    | 19 |
| <br>                      |    |
| 3장 주민참여 교육 현황 .....       | 23 |
| 1절. 주민교육 유형과 특징 .....     | 23 |
| 2절.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      | 25 |
| 1.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   | 25 |

|                            |    |
|----------------------------|----|
| 2. 세종시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    | 28 |
| 3. 기타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     | 30 |
| 3절. 기타 주민교육 .....          | 40 |
| 1. 도시재생 교육 .....           | 40 |
| 2. 주민자치 교육 .....           | 41 |
| <br>                       |    |
| 4장 주민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 45 |
| 1절. 전문가 자문 의견 .....        | 45 |
| 1. 제도 운영 관련 의견 .....       | 45 |
| 2. 교육 콘텐츠 관련 의견 .....      | 48 |
| 2절. 주민교육의 문제점 .....        | 50 |
| 1. 제도 운영의 문제점 .....        | 50 |
| 2. 교육 콘텐츠의 문제 .....        | 51 |
| 3절. 주민교육 개선 방안 .....       | 52 |
| 1. 제도 운영의 개선 방향 .....      | 52 |
| 2. 교육 콘텐츠의 개발 .....        | 53 |
| <br>                       |    |
| 5장 결론 .....                | 59 |
| 1절. 연구 요약 .....            | 59 |
| 2절. 정책 제언 .....            | 60 |
| <br>                       |    |
| 참고문헌 .....                 | 61 |

## 표 차례

|                                  |    |
|----------------------------------|----|
| [표 3-1] 국내 주민교육의 유형 및 특징 .....   | 23 |
| [표 3-2]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교육과정 ..... | 27 |
| [표 3-3]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   | 31 |
| [표 3-4] 인천광역시 예산학교 운영계획 .....    | 34 |
| [표 3-5] 도시재생 뉴딜교육 .....          | 41 |
| [표 4-1] 거주 형태를 고려한 주민교육 모델 ..... | 54 |



# 서론

-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절. 연구방법 및 내용
- 3절. 선행연구 및 차별성

## 1장





# 1장 서론

##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 199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됨. 그러나 지방자치 제도의 취지에 맞는 주민의 지방정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이러한 의미에서 아직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주민들의 지역 정치에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주민들이 직접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여러 종류의 주민참여 제도를 구비하기 시작함.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및 주민소송,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자치회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을 제도적 발전과정이 진행되어 옴
- 이와 같은 다양한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제 주민들의 참여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좋은 제도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제도 운영이 쉽지 않은 것이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음
- 저조한 주민참여는 지방정치의 장에서 유력자, 이해관계자 또는 관변단체 위주의 참여를 유도할 가능성을 높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 민관 거버넌스가 실현될 공간이 축소되는 위험성이 커지게 됨

-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주민이 도시재생이나 주민자치회와 같은 주민참여 관련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복잡한 참여 방법과 과도한 시간 투자, 참여 주제와 자신의 관심도 불일치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교육 주체 측이 주민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도 함. 이러한 예의 대표적 사례는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서울 서초구), 찾아가는 주민자치위원 교육(부산 외 전국 다수), 찾아가는 우리마을 영화사랑방(인천 남동구 구월1동), 찾아가는 마을 사랑방 강좌(전북 진안군 마을만들기 지구협의회) 등을 들 수 있음
- 한편 주민교육에 있어 주민 요구의 다양화, 삶의 질 향상, 새로운 공동체 문화와 그에 따른 지역 리더의 필요성, 고령사회를 맞아 생애 단계별 전환교육 등 다양한 교육적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주민들로 하여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 운영 방식의 개발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됨

## 2.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주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참여를 가깝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참여 모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절.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주민참여 제도 운영 현황 사례 조사
  -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주민참여 제도 분석
  - 주민참여 관련 교육현황 분석
  
- 주민참여 관련 전문가 자문

### 3절. 선행연구 및 차별성

- 고경훈 외(2012)는 주민참여의 개념, 유형, 발전과정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특히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제도 하에서의 주민참여 발전과정과 유사한 한국의 발전과정을 비교하면서 설명함
- 배봉호(2014)는 자치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습 수요자 중심의 접근방식, 지역 리더 전문가 양성과정의 필요성, 지역에서 주민의 학습설계를 지원하고 지역활동가를 발굴할 수 있는 전문가 배치의 필요성 등을 제안함
- 이정석(2016)은 부산광역시 사례를 들면서 원도심 활성화 역량 결집을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주민참여형 교육의 원칙으로 공평한 학습 기회와 선택지의 제공, 실용성에 기반을 둔 재미 있는 진행,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 신뢰와 협력에 기반을 둔 교육 운영, 교육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명확한 동기 부여와 배려 등을 제시함
- 문효근 외(2021)는 현재까지의 주민자치 교육이 교육생의 참여 의지가 저하된 일방적, 형식적 교육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주민자치 교육의 목표를 역량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사회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력과 민주시민성을 고취할 수 있는 정기적 커리큘럼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김흥주(2020)는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교육이 사후교육을 전제로 수시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사전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나 법적 의무와 책임이 덜한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사전교육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임. 따라서 위원들의 교육은 사후교육을 전제로 주민자치회

역할과 운영에 관련된 내용(예: 마을계획수립, 주민총회, 주민참여예산제, 마을만들기사업 등)들을 수시로 지속적으로 교육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임

- 전대욱(2022)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공동체 정책방향과 과제를 정리하면서 주민자치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함. 그는 주민의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이 실시됨과 동시에, 재원 역시 정부보조금이나 공공재원을 지양하고 자체 재원의 확충을 위한 사업들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함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대전시와 세종시의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 교육 도구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 차별됨



## 주민참여 이론과 제도

1절. 주민참여의 발전과정

2절. 주민참여예산제

3절. 새정부의 주민참여 정책 기초

## 2장





## 2장 주민참여 이론과 제도

### 1절. 주민참여의 발전과정

#### 1. 지방정치와 주민참여

- 지방자치는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고 중앙정치에 지방정치에 예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정치와 정책결정 과정을 확립하기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제도임
- 지방에서의 정치는 지역 단위의 한정된 범위 안에서 자원 배분에 대한 정책의 선택과정을 의미함. 이러한 지방의 정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장으로 규정할 경우, 그 중심에는 주민이 위치하게 되므로 그 역할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게 됨
- 이러한 의미에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공식적인 권한을 갖지는 않으나 모든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주민이 결정 및 집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음(고경훈 외 2012)
- 결국 주민의 정치참여는 지방정치에서 주민의사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임과 동시에 또한 지방정부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 제고와 더불어 주민의 지방정부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확보하는 효과를 낳게 함
- 주민참여는 행정의 책임성과 반응성 확립, 사회적 형평성 제고, 주민에게 공익정신과 자주성 고취, 지방정부와 주민 또는 주민 간 갈등 해소

로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 행정의 민주화와 지방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순기능 역할을 수행함(지방자치실무연구소 1995)

- 그러나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익숙해진 주민이 대표자 선출 이후 정치 주체로서의 참여를 포기하고 모든 결정을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현상이 나타남. 또 하나의 측면으로는 정치인들의 비리나 부패 등을 접한 유권자 중 일부가 정치에 대한 회의감을 가진 나머지 정치적 무관심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발생함. 이와 같은 현상이 심화될 경우 주민의 직접 참여를 필요로하는 지방자치의 실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됨

## 2.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유형

-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음 (고경훈 외 2012)
  - 주민참여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현대 민주주의의 대표적 특징인 간접민주주의 방식으로는 행정 기관과 주민 간 직접적이고 의미 있는 상호협조를 통해 행정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간접민주주의 방식이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대표자와 주민의 의사 사이에 괴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주민이 직접 지방행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이해에 관계되는 문제를 자기 책임하에 처리할 필요성이 제기됨
  -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강해지고 참여 욕구가 나타남에 따라 지방행정 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요구에 따르는 책임을 분담시키고 주민의 협력과 지지를 구할 필요가 생겨나게 됨
  -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 및 주민 간 협동을 증진시킬 수 있음. 주민참여는 주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관한 사안에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이견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 간의 협동을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음

- 전문가주의의 한계 극복의 측면에서 정책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음. 전문가들은 정책의 대상자인 고객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확대시키고 전문가로서 비전문가인 정책대상자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전문가적인 견해로서 이들을 교육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주민 참여를 통해 보다 많은 행정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한편 주민참여는 참여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함(전영평 2022).

- 먼저 시민운동(citizen action)으로 시민들이 결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로비, 시위 등을 들 수 있음
- 시민개입(citizen involvement)으로 정책결정, 사업,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얻기 위한 공청회, 자문위원회 등 정부 주도로 이루어짐
- 선거참여(electoral participation)로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투표, 후보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의미함
- 의무참여(obligatory participation)로 시민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납세, 배심원, 병역, 교육 등의 활동을 포함함

### 3. 한국의 주민참여 전개과정

○ 한국의 주민참여의 전개과정은 군사독재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면서 진행되어 옴. 이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발전과정과 매우 유사한 과정을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정치참여와 시민참여가 활성화됨(전영평 2022)

○ 1970년대 미국은 대량적인 시민소외, 정치 불신, 위축 현상(투표 이탈, 정당원 감소, 정부 신뢰 감소 현상)이 발생함과 동시에 시민조직, 공익 집단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남. 이 시기에는 정부를 시민들에게 보다 접

근 가능하고, 책임 있게 만들려는 노력이 나타남. 결국 시민의 무관심과 냉소주의가 증가하면서도 민주주의의 새로운 부활을 보여주는 징후가 나타난 것임

- 미국 사회의 시민 참여는 정부 주도적(government-initiated) 시민 참여(개입)와 시민 주도적(citizen-initiated) 시민참여가 동시에 나타나는 양상을 보임. 시민은 시민대로 시민조직을 만들어 정부에 영향을 미치려 하였고, 공직자들은 정부를 시민들에게 보다 접근 가능하고 책임성 있게 만들려는 노력을 시도함

○ 시민운동은 주민조직, 공익집단, 소비자집단, 자발적 조직들이 중심이 되어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감시하는 것을 주요과제로 하고 있는 반면, 정부 주도적 시민개입은 시민들을 참여시켜 행정적 의사결정과 정부사업에 대한 개선과 지원을 획득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따라서 정부주도에 의한 시민개입은 시민들의 제도적 참여를 위한 수많은 입법과 규제를 낳게 만들었으며 그러한 법과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등장하게 됨

○ 한국의 주민참여는 민주화와 분배정의 등을 구현하려는 시민참여 형태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걸맞는 제도의 구비와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어 가는 방향으로 전개됨. 아직은 관 주도의 주민참여 형태에서 조금씩 주민이 주체가 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결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주민발안, 주민소송 등의 주민참여 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지역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기재로 활용되고 있음

- 주민투표는 주민이 직접 지역의 주요 사안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 기능을 보완하는 제도임

- 주민발의는 주민이 적극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의 권한을 일부 제약하고 주민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임. 대표적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 주민감사청구권 등이 있음
- 주민소환은 주민들이 선출직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공직자를 임기 중에 소환하는 탄핵 제도임
- 주민소송은 공직자가 불법 부당한 행위로 주민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사법심사를 통해 이를 예방하는 제도임
-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정부에서 처리된 사안이 법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임. 이 과정은 주민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함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로 함

## 2절. 주민참여예산제

- 본 절에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참여 형태 중 대표적 사례인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내용에 대해 요약적으로 설명하고자 함
-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온 예산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제도임.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까지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김정희 2019)
-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에서 시작한 지방예산과정의 시민참여는 지방정부의 선도적인 노력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제도화됨
- 노무현 정부는 2003년 7월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도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 과제로 정책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적 예산편성 및 집행을 설정함. 또한 2003년 7월 말에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예산편성과정에서 인터넷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단체간담회 등의 ‘참여형 예산편성’의 도입을 권장함. 이러한 노력과 지원에 힘입어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2004년 3월 25일에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함. 이에 이어 2004년 여름에는 울산 동구, 전남 순천, 대전 대덕구, 충남 아산 등을 중심으로 참여예산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제정되면서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예산과정의 주민참여를 위한 조례가 점차 확산하기 시작함
- 2005년 8월에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

적으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2005년 12월에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2006년 8월,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기준을 제시한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기초로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됨

- 2012년 지방예산과정에 시민참여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이 노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됨.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형태의 참여방식을 도입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방식들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이름으로 실시됨. 그 이후로도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는 계속 확산하고 확대됨
- 2014년 5월에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제시한 주민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임의조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으로 규정함
- 2015년 5월에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명시하면서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2018년 3월에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확장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제외한 지방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과 주



민 의견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주민참여예산기구를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3절. 새정부의 주민참여 정책 기초

- 2022년 출범한 새정부의 주민참여 정책기조는 주민자치 관련 정책방향과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방향을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음

#### 1. 주민자치 관련 정책방향

- 새정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동안 행정에서 필요한 주민협의 기관화가 되고 권한과 재원 면에서 관에 의한 의존성이 강화되는 것을 지양하고 순수한 민간 역량으로 자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개선을 신규과제로 제시함
  - 아직 순수 민간 활동의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바 없으나, 주민자치위원회의 화동에 있어 행정과의 협력 및 공공재원 활용 등의 관 주도 마중물 전략을 지양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주민사업에 있어 공적 지원에 의존하기 보다 순수한 주민역량으로 활동을 지속시킴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시키는 정책 추진이 전망됨
  - 나아가 재원 역시 주민 자체사업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사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2.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방향

-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 역시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단위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시킴. 이를 위해 인적자원 확충, 영국의 시민센터와 같은 지역인프라의 강화를 도모함

- 이러한 측면에서 새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등에서 추진해 온 마을기업 육성, 청년공동체 활성화 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기존사업 정비와 더불어 민생안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됨 (전대욱 2002)

## 주민참여 교육 현황

- 1절. 주민교육 유형과 특징
- 2절.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 3절. 기타 주민교육



### 3장. 주민참여 교육 현황

#### 1절. 주민교육 유형과 특징

- 현재 주민교육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체사업, 마을기업사업, 도시재생사업, 평생교육사업, 자치분권의식,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을문화육성사업, 여성농업인육성사업, 농촌활성화사업 등을 위해 주민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권자경 2022)
  
- 국내 주민교육의 유형 및 특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1] 국내 주민교육의 유형 및 특징**

| 교육명       | 대상           | 특징   |
|-----------|--------------|--|
| 주민자치위원교육  | 주민자치위원       | 전국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교육   |
| 마을만들기사업교육 | 마을주민         | 행정안전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의 지원으로 마을단위 활성화사업을 위한 주민대상교육                                      |
| 마을공동체교육   | 마을주민         | 행정안전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의 지원으로 마을단위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주민대상교육                                     |
| 마을기업학교    | 마을주민         | 행정안전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의 지원으로 마을단위 기업활동으로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교육                               |
| 도시재생학교    | 마을주민 및 리더    | 국토교통부 및 해당지방정부의 지원으로 구(원)도심 및 신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교육                                    |
| 평생교육차원 강좌 | 주민 누구나       | 각 지방정부별로 지역교육청 및 공무원연수원 등에서 지역주민 누구나 생애주기 평생에 배움의 기회를 제공                             |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들을 대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예산 및 재정에 대한 교육을 4주-8주 등 각 지방정부의 상황에 맞게 교육 |

| 교육명        | 대상      | 특징   |
|------------|---------|--|
| 마을 문화강좌    | 문화소외 계층 | 문화체육관광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는 문화생활이 어려운 농촌, 어촌, 산촌마을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제공         |
| 여성농업인 육성교육 | 여성농업인   | 농림축산식품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는 농산어촌의 전문 농업경영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교육                                     |
| 농촌교육       | 농업인     | 농림축산식품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는 농산어촌의 교육문화환경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교육                                      |
| 자치분권 교육    | 주민 누구나  |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릉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주민대상 자치분권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교육 시설기관에서 자치분권 교육, 정치의식 교육 |

출처: 권자경 2022.

## 2절.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 1.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 1) 개요

- 대전광역시는 예산편성과정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의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시민의견 수렴, 절차 등)  
·특광역시 최초 제정,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기본조례」(2006.11.10.)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2014.08.14.) 제정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10명(임기 2년), 공모사업 심사 및 예산편성 방향 의견 제시(전체회의, 운영위, 분과위)
  - 일반시민: 시민제안 공모, 시민투표 및 시민총회, 예산편성 설문조사, 시민공청회 등
- 운영 방향
  - 주민참여예산 총200억 원으로, 시정참여형(50억), 정책숙의형(50억→60억), 구정참여형(50억), 동분야(36억→40억)로 구분하여 진행함
  - 숙의 토론에 기초한 시민의 숙의역량 및 시민관계망 강화를 위해 민



관협치, 정책제안 플랫폼(대전시소, 국민정책참여플랫폼,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등) 연계함

- 대전 전체 81개동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및 시·자치구·동 협업으로 주민자치형(48개동), 마을계획형(33개동) 주민참여예산
- 소상공인, 청소년, 온라인 취약계층 등 참여 확대
- '찾아가는 제안의 날'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주도

## ○ 주요 내용

- 정책숙의형 공모사업 및 동 참여형 사업 확대(2021년 대비)
- 주민참여예산 기구 구성: 8기 위원회 7개 분과, 위원 위촉시기 조정(7월 11일→1월 1일)
- 예산학교 운영: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협업 추진
-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운영: 교육청,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
- 시민참여 확대: 컨설팅 확대(76회→100회), 시민투표단 확대(360명→500명), 현장투표소 운영(구별 2개소), 찾아가는 홍보부스 운영(구별 2회)

## 2) 주민참여예산학교

### ○ 운영방향

- 대전평생교육진흥원과 협업으로 교육 운영
- 수준별·단계별 맞춤 교육 실시(기본교육, 심화교육, 전문교육, 찾아가는 교육)
- 찾아가는 예산교육과 컨설팅을 연계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실시

○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음

- 주최·주관: 대전광역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 운영: 기본, 심화, 전문, 찾아가는 예산교육 등 네 개의 유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함

**[표 3-2]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교육과정**

| 구분        | 교육대상           | 교육내용                    | 교육횟수       |
|-----------|----------------|-------------------------|------------|
| 기본교육      | 대전시민           | 주민참여예산의 이해, 숙의절차 기본교육   | 4회(3~4월)   |
| 심화교육      | 일반시민, 주민참여예산위원 | 주민참여예산 사업 평가 정책 우선순위 조정 | 1회(7월)     |
| 전문교육      | 주민참여예산위원       | 시민제안사업 심사, 예산편성 방향      | 2회(5월, 9월) |
| 찾아가는 예산교육 | 자치구 주민, 단체     | 주민참여예산의 이해 제안서 작성       | 10회        |

출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 방향: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협업
- 대상: 대전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 내용: 청소년 대상 예산학교 운영 및 맞춤형 교육 영상 제작
- 사업비: 20백만원

## 2. 세종시 시민참여예산제 교육

### 1) 개요

#### ○ 목적

-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시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참여와 소통의 세종특별자치시정 구현

#### ○ 운영 방향

- 시민이 주인되는 시민참여예산제도 추진
- 안정적인 주민참여예산 확보로 시민의 시정참여 보장
- 민·관 소통 플랫폼 구축 및 숙의·협업 과정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

####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절차)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주민참여 예산제도)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 위원회 운영

- 위원회 개요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30명 이내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 구성: 전문가위원 8명, 시민위원 22명
  - 기능: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수렴

- 읍면동 예산협의회: 읍면동별 각 15명 이내, 194명
- 구성: 읍면동별 15인 이내
- 임기: 1년(한차례만 연임 가능)
- 기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세 환원사업 등 사업발굴 및 우선순  
위 결정

○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 공모기간: 5월~6월
- 대상사업: 청소년을 위한 소규모 사업
- 사업심사: 청소년참여위원회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운영

- 추진시기 및 방법: 상·하반기 2회, 서면심사·현장확인 등

## 2) 예산학교 운영

○ 운영 시기

- 연 2회(4월, 9월)
- 1개월 과정(5주, 주1회), 10시간 교육

○ 대상: 세종시민(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투표단 등)

○ 내용: 시민참여예산제도 소개, 지방재정 운영체계 등

○ 운영: 세종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위탁

### 3. 기타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 여기에서는 대전시와 세종시 외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함

####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기획제안형 시민참여예산: 사회 현안사업
  - 서울살림 천만선택: 시민삶 연관 재정이슈
  - 자치구 참여예산: 지역현안 시민제안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됨
  - 구성인원: 100명 이내, 임기 1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선발방법: 참여자 공개모집 및 컴퓨터 추첨(예산학교 수료자 중)
  - 역할: 기획제안형 시민제안사업 심사 참여, 시 재정이슈에 대한 의견 제시
  -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구성: 10명 내외(시민참여예산위원, 주요 의제별 전문가, 담당공무원 등) 구성하여 참여예산제 운영 총괄지원(운영지원 및 자문)

#### □ 예산학교 프로그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의미: 시민참여예산 및 서울시 예산 현황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적으로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시민 교육과정
- 대상: 서울시민 누구나
- 교육과정: 온라인교육(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과정별 3시간

[표 3-3]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 구 분    | 교육대상      | 교육내용  |
|--------|-----------|---|
| 입문과정   | 시민<br>누구나 | 참여예산제도 의의와 국내외 사례<br>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역사와 현황<br>2022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이해      |
| 재정참여과정 |           | 예산의 기본 이해<br>서울시 주요정책과 예산 이해<br>서울시 주요 재정 이슈 해설 및 참고 의견               |
| 사업제안과정 |           | 제안 발굴 참고할 서울시 분야별 주요 사업 소개<br>사업제안 시 유의사항 안내<br>사업제안 사례 및 제안자 경험 등 공유 |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 구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00명(시민공모 86명, 전문가 7명, 당연직 7명)
- 임기: 2년(활동실적에 따라 1회 연임 가능)
- 조직: 7개 분과위원회, 16명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 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 ○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작성

- 주민제안사업 공모 및 심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예산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으로 주민참여 범위 확대

### ○ 청년 참여예산 활동 지원

-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대상 주민참여 예산교육 추진
- 지역 청년활동가 연계, 청년정책 실현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발굴
- 부산 관내 대학교와 협력관계 구축(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위원 활용)

- 아동·청소년 참여예산 활동지원

## □ 교육 프로그램

-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향
  - 시민 밀착형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으로 시민역량 강화
  - 제안 사업 검토, 위원회 심의 등 제도 과정별 연계 운영
  - 시민, 청소년, 청년, 위원회 대상으로 세분화하여 교육대상별 운영
- 온라인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활성화
  - 온라인 주민참여 예산학교 상시 운영(유튜브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게시)
  - 제도의 이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 향상 등
- 풀뿌리 예산학교 운영
  - 재정의 이해 등 예산교육 확대를 위한 동영상 배부
  - 구·군별 행사 및 주민자치회 등 회의시 동영상 교육

## ■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 대구광역시는 청년참여형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함
  - 청년 일자리 지원, 창업 지원, 맞춤형 교육, 창작 활동 지원, 복지 지원 등
  - 2022년 사업규모 20억원(전년대비 10억원 증액)
  - 청년 참여형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홍보·교육·제안 등 청년 분과위원회의 자발적 활동 유도

## □ 교육 프로그램

### ○ 사이버예산아카데미 운영

- 기존 기본교육, 심화교육, 읍면동참여형교육, 예산편성 및 운영교육 등 4개 과정에서, 2022년 일반시민 대상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신청서 작성법' 교육과정 신설하여 5개 과정 운영
-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 실시

### ○ 세부 과정은 기본교육, 심화교육, 읍면동참여사업, 예산편성 및 운영과정, 주민참여예산사업신청서 작성법,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타당성 검토교육, 읍면동 참여형 운영방법, 찾아가는 예산학교, 예산바로쓰기 감시단 워크숍, 주민의견서 작성교육, 읍면동참여형사업컨설팅단교육, 청소년기본교육 등으로 이루어짐

##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 인천광역시는 시민참여의 저변확대를 위해 사업유형의 통합체계화(5개 →3개)와 협치단 구성·운영, 동 주민자치회 지원을 확대함 확대(28개동 →73개동)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층 비중 확대(2020년 21명→2021년 41명)로 참여계층 다양화

## □ 예산학교

- 2022년 인천광역시 예산학교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3-4] 인천광역시 예산학교 운영계획**

| 시기   |       | 교육제목         | 교육내용   |
|------|-------|--------------|--|
| 기본과정 | 2월    | 상반기상설 예산학교   | 주민참여예산 무엇이 좋고, 무엇이 필요한가?<br>인천 주민참여예산 성과와 주민참여 신청방법                            |
|      | 상시    | 온라인주민 참여예산학교 | 1~3강, 주민참여예산, 무엇이 좋을까요?<br>4~5강, 지방예산과정과 주민 참여예산                               |
|      | 8~10월 | 하반기상설 예산학교   | 주민참여예산 무엇이 좋고, 무엇이 필요한가?<br>인천 주민참여예산 성과와 주민참여 신청방법                            |
| 심화과정 | 5-8월  | 섬지역 예산학교     | 주민참여예산제 이해와 사례 및 주민참여방법<br>섬 지역 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및 섬 지역 참여예산 주민제안 발굴                |
|      | 7-8월  | 참여예산 리더교육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절차<br>2022년 인천시 주요사업<br>2023년 예산편성 주요쟁점                            |
|      | 9-10월 | 찾아가는 예산학교    | 주민참여예산제 이해와 사례 및 주민참여방법<br>사회적 약자, 특정의제를 위한 의제발굴 워크숍                           |
|      | 9-11월 | 맞춤형 예산학교     | 주민참여예산 이해와 주민참여방법, 주민제안 부정적 사례<br>분야별 주민제안 발굴 워크숍                              |
| 전문과정 | 4-6월  | 협치형 의제 발굴 지원 | 주민참여예산제 이해와 주민제안 심의 일반특성<br>협치형 의제발굴 운영 취지와 절차 및 협치단 역할<br>분야별 협치단 정책의제 발굴 워크숍 |
|      | 7-8월  | 참여예산 리더교육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절차<br>2022년 인천시 주요사업<br>2023년 예산편성 주요 쟁점                           |

출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대상 신임위원 필수 교육 운영

○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

- 참여예산 교육 및 청소년분야 사업 발굴

○ 상설, 맞춤형, 전문과정 등 예산학교 온라인 과정 운영

○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 인력구성: 총 5명(센터장 1, 전문요원 3, 행정지원 1)
- 기능: 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협치형 운영 지원, 참여 예산 생태계 조성,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운영, 참여예산 기획 홍보

□ 광주광역시 예산학교

- 일반시민, 참여예산 위원 등을 참여 대상으로 하며, 수요자 맞춤형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 교육과정은 기본교육(일반시민 대상), 역량강화교육(시민참여예산위원 대상), 찾아가는 예산학교(자치구, 청년, 여성 등 대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울산광역시 예산학교

- 운영방향: 주민참여예산 위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시민 접근성 확대
- 추진계획
  - 예산학교 기본과정, 심화과정 운영
  - 교육내용: 주민참여예산제 소개, 주민제안사업, 지방재정, 예산편성 등 교육
- 찾아가는 맞춤형 예산학교
  - 마을 단위의 예산학교 신청시 방문 교육
  - 고등학생 대상 참여예산제 현장 교육

## □ 경기도 예산학교

- 경기도 예산학교는 과정별 강좌명을 다른 지역과는 차별되게 사회복지, 청년, 여성, 일반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함
  - 사회복지: 불편없이 살기 좋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함께 만들기
  - 청년: 경기도 청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행복한 경기도 함께 만들기
  - 여성: 여성이 힘을 얻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함께 만들기
  - 일반: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함께 만들기

## □ 강원도 주민참여예산교육

-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도민대상)
  - 예산학교 수강이 주민참여예산 제안 등으로 연계되도록 교육과정 개선
  -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사업제안서 작성, 사례중심교육)
-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주민참여예산위원, 공무원 등)
  - 주민참여예산 참여 절차 및 타시도 우수사례 소개 등
  - 사업제안서 작성방법 및 사업제안 평가(모니터링) 방법 등
- 권역별 찾아가는 맞춤형 예산학교 운영(수요조사 후)
  - 지역 내 대학교, 민간단체,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 대상별 교육 실시 (4회)
  - 교육 희망기관 대상, 3~5월 집중공모

## □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교육

- 교육대상: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제도에 관심 있는 도민
- 교육목적: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도민의 제도 이해도 제고

- 교육내용: 참여예산 제도 취지 및 사례, 사업 발굴 방법, 충북 예산 이해, 우선순위 심사 등(6강, 103분)

####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학교

- 추진 방향
  - 도민참여 저변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 도민참여예산위원·공무원 대상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심화과정 운영
- 수요자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
  - 주민자치회 대상 예산학교 운영을 통한 참여예산제 홍보 및 인식 확산
  - 인재개발원과 협의,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이버 강의 개설
- 비대면 학습
  - 충청남도 도민 사이버교육센터(인재개발원 온라인 강의시스템 활용)
  -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참여 방법 및 이해도 향상

#### □ 전라북도 예산학교 운영

- 시·군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 기간: 8 ~ 12월
  - 대상: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 내용: 지방예산제도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교육
- 대상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학교 교육
  - 예산 관련 지식 함양과 실질적 이해를 돕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으로, 주민참여예산 특징 및 우수사례 등 교육

## □ 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학교

### ○ 맞춤형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대상: 도·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 내용: 주민참여예산제 이해 및 예산관련 기초지식 교육 등

## □ 경상북도 예산학교

### ○ 교육대상: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위원 및 각종 사회단체 임직원

### ○ 교육프로그램

- 경상북도 재정여건, 예산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 민간보조금 집행 및 운영 방법
- 주민참여예산제도 소개 및 참여예산제 참여 방법 등

### ○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 학교 운영

- 대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무원, 도민 누구나
- 내용: 주민참여예산제 소개 및 사례 소개, 제안사업 작성법, 사업심의·선정방법 등 교육

### ○ 지방보조금 온라인 교육 운영(연중)

- 보조금 예산편성, 집행 및 정산 방법, 감사사례 소개 등

## □ 경상남도 도민예산학교

### ○ 교육대상: 일반도민, 주민자치회 위원

### ○ 교육시간: 1회당 3시간

- 교육내용: 주민참여예산제(분야별 맞춤형 등) 이론교육 및 제안서 작성 실습 교육
  - 주민참여예산제 및 정책의 이해(55분), 의제발굴 테이블 토론(35분), 우선순위 의제 선정 투표 및 결과 공유(15분), 테이블별 기획서 작성(40분), 기획서 완성 및 결과 공유(35분)

**□ 제주도 주민참여예산학교**

- 대상: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필수), 참여희망 도민 누구나,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및 관련 사업 담당공무원 등
- 교육내용: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성과, 우수사례, 제안서 작성 방법 등
- 교육운영
  - 읍면동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 인재개발원 주민참여예산학교

### 3절. 기타 주민교육

#### 1. 도시재생 교육

- 국토부는 ‘URIS 온라인 도시재생 학습 LMS 1)’을 운영중으로, 도시재생의 정책 및 제도 등 12개 분야 30개의 교육 프로그램(2021년 기준)이 있음
- 서울시는 2018년부터 도시재생광역지원센터의 전문가교육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갈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초급·중급·고급 3단계의 ‘도시재생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부산 영도구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주민교육을 통해 ‘빈집줄게 살려올래’ 프로젝트를 추진중임
- 세종시 조치원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뉴딜대학’을 통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주민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교육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 도시재생 LMS는 국토부의 도시재생 관련 학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자료에 대한 시청 및 교육관리 수행 서비스임. 국토부 URIS온라인도시재생학습 <https://edu.city.go.kr:8092/about-us/>(검색일:2022.09.05.) 참고.

[표 3-5] 도시재생 뉴딜교육

| 분류      | 지역      | 교육목적  | 주요 특징  |
|---------|---------|-------|--|
| 운영 체계   | 서울시     | 전문가양성 | 초급-중급-고급 3단계 교육 및 인적자원지원시스템을 통해 코디네이터 10명 채용             |
|         | 대구시     | 주민교육  | 지역의 전문가와 전공 대학생이 지도교수와 도우미로 활동, 교육 결과물 중 28건이 국가공모사업에 선정 |
|         | 경남 진주시  | 전문가양성 | 경상대 등 전문교육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
| 교육 프로그램 | 경남 밀양시  | 주민교육  | 주민주도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관광PD등 전문가 참여                  |
|         | 부산 영도구  | 주민교육  |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활용, 외지인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운영                  |
|         | 대전 대덕구  | 주민교육  | 지역자원 활용을 위한 '공정생태여행' 프로그램 구성·운영                          |
| 성과 창출   | 세종 조치원읍 | 주민교육  | 협동조합구성, 지역특화 먹거리(복숭아 맥주)창출, 성공적으로 지역축제 개최                |
|         | 경북 고령군  | 전문가양성 | 지역전문활동가를 양성하고 현장지원센터에 채용                                 |
|         | 인천 강화군  | 주민교육  | 지역자원 발굴 및 주민공모사업 선정, 지역 축제화(강화문화재야행)                     |
|         | 부산 동래구  | 주민교육  | 주민아이디어로 특화상품 및 브랜드 로고 개발, 지역홍보영상 제작                      |
|         | 제주 제주시  | 전문가양성 | 도시재생건축가 양성   |
|         | 충남 공주시  | 주민교육  | 교육과정을 통해 도출된 주민설계안을 바탕으로 건축구상계획 수립(나태주 문화창작 플랫폼)         |

출처: 국토부(2021)

## 2. 주민자치 교육

-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만을 담당하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과 발전을 위한 사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함(「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 제2항). 행정안전부는 2018년에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에서의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제 편성을 권고함

- 주민자치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모두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음
  - 1단계는 ‘기초교육과정’으로 일반 주민, 신임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함
  - 2단계는 ‘리더교육과정’으로 주민자치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분과위원장)을 대상으로 함
  - 3단계는 ‘정책교육과정’으로 공무원(읍·면·동장, 자치담당, 실무자)원을 대상으로 함
  - 4단계는 ‘마을사업 컨설팅과정’으로 전문가, 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함

# 주민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1절. 전문가 자문 의견
- 2절. 주민교육의 문제점
- 3절. 주민교육 개선 방안

## 4장



## 4장 주민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절. 전문가 자문 의견

- 주민참여 교육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참여자는 다음과 같음
  -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담당자 1명 (A)
  - 주민자치회 교육이수자 1명 (B)
  - 전문가 2명 (C, D)

#### 1. 제도 운영 관련 의견

##### 1) 지역 특성 반영

- 주민은 “내가 참여해 보았자, 달라지는 것도 없다”는 냉소적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 결정이 주민의 삶에 더 많은 영향을 주게 하면 됨. 예컨대, 아파트 대표회의의 경우, 회의 결정이 아파트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때문에 회의 결과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는 높은 편임. 따라서 시정, 구정과 같이 이미 법·제도적으로 구성된 공적 영역보다는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작지만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C)
- 원도심과 신도심도 대전과 세종은 특성이 다름. 대전의 원도심인 대덕구와 동구는 비농촌지역(대덕구는 산단지역임) 반면, 세종의 경우 농촌지역(조치원읍 등)임. 따라서 세종시의 경우 농촌과 도심을 잇는 교통문제(특히 고령자와 같은 취약계층 교통문제 해결)를 고려할 필요가 있

고, 대전시의 경우, 문화관광, 마을만들기 등 비교적 소프트웨어적인 주민참여 사업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D)

- 거버넌스 참여체들 사이에 커다란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대전시 거버넌스는 민주성 확보 차원에서의 제도적 노력,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대전시 중심의 촉진자 역할, 시민과의 관계개선에 직접적 초점을 둔 일하는 방식의 변화, 시민사회단체와 기업과의 관계 선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전시와 세종시 주민의 특성을 먼저 검토하고 분석해야 함. 왜냐하면, 대전시와 세종시의 주민 연령의 차이(대전시 평균연령 42.7세 / 세종시 평균연령 37.7세)에 따라 지역 주민이 인식하는 마을 공동체의 문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임(D)

## 2) 교육생 의견 수렴 및 반영

- 주민참여예산제와 민주시민교육 등을 통해 진행된 주민참여 교육의 내용과 그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A)
- 주민이 제시한 의견이 무시되지 않고 의사결정에 반영된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함. 구체적으로 참여자의 존재가 머리 수 채우기 등과 같은 들러리가 아니고, 적극 참여할수록 참여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지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A)
- 주민참여의 정도는 자신의 참여와 자신 생활과의 밀접도에 따라 결정됨. 즉 자신의 참여와 결정이 자신의 이익에 많이 영향을 줄수록 참여도는 높을 것임. 따라서 주민참여 의식은 참여와 영향력을 일치하게 만드는 제도화가 관건이라고 사료됨(B)

- 주민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①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여건 및 환경 조성, ②주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프로세스 또는 매뉴얼 마련, ③주민 수요에 기반한 주민참여 사업 범주화 (ex. 주거지 정비 문제, 교통문제, 취약계층 문제 등), ④지역공동체 문화를 형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연계형 사업 구상 등이 필요함(D)
- 국내 성공적인 주민참여 사례를 검토하고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전문가 면담을 통해 주민참여 사업 추진에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D)

### 3) 민간 자율역량 강화

- 신정부 출범에 따라 민간 자율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 부응하는 주민참여 제도나 정책 개선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A)
- 참여자 그룹의 big mouth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 big mouth는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음(B)
-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함.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권한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참여 사업은 해당 지역주민 참여의 효능감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임(D)

### 4) 집행부의 사업 영역별 주민참여 유도

- 현재 동 단위, 구 단위, 시 단위로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의 경우에도 동 단위 위주로 운영하고, 구나 시의 경우에는 지정 전략에 부합하는 영역에서의 참여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임(A)

## 5) 교육 시간 배려

- 주민참여 교육의 거의 모든 대상자는 평일에 직장을 다니지 않는 주민임. 또한 교육시간에도 제약이 있음. 이에 보다 많은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C)

## 2. 교육 콘텐츠 관련 의견

### 1) 민간 자율역량 강화

- 신정부 출범에 따라 민간 자율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 부응하는 주민 참여 제도나 정책 개선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제도 및 정책 실현을 위한 새로운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임(A)
- 마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스스로 찾게 할 필요가 있음. top-down 이 아닌 bottom-up 방식이 중요함(B)

### 2) 주민 특성의 고려한 프로그램 세분화

- 연령대별 교육 프로그램의 세분화가 필요함. 대전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세종은 가장 젊은 도시와 인구증가의 특성이 있어서 대전-세종을 묶어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효과가 없음
  - 대전은 젊은 층을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
  - 세종시는 유아, 초등 교육 환경은 좋으나 중고등학교의 입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B)

- 마을 및 주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 프로그램이 만연하여 내실있는 교육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함(B)
- 어디에선가 들어본 듯한 교육 내용, 소통, 갈등 해소, 회의기법 강의 등 상투적 내용의 강의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B)
- 유형별로 세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해당 마을에 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기본과목, 선택과목을 주민 참여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B)
- 세종시의 원도심-신도심의 주민 참여활성화 방안으로는 신도시 주민은 콘크리트 숲으로 둘러 쌓인 공간에서 벗어나 원도심의 자연을 즐기는 프로그램 개발함. 원도심 주민은 신도시의 다양한 쇼핑, 문화, 인공적 환경을 즐기는 프로그램 개발하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것임(C)
-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대표회의, 시민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농촌의 경우 시민단체(예, 새마을회, 자원봉사회 등), 주민대학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C)
- 주민참여하면 주민참여 예산제가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음. 주민참여 예산제의 특성상 예산정책 관련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교육 프로그램의 경직성(생소한 예산관련 용어 등)으로 인해 교육의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도 있음. 따라서 주민참여 교육은 실제 경험을 토대로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매칭하여 설명하고 교육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D)



## 2절. 주민교육의 문제점

### 1. 제도 운영의 문제점

- 앞에서 전문가 주민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교육,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교육의 문제가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됨. 기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주민자치 교육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문화여가프로그램 위주의 교육
  - 위원과 리더에 대한 자치역량 강화 교육기회의 부족
  - 교육내용 및 방법의 일회성·단편적·강의식 집합교육 실시
  - 주민자치교육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주민자치교육 예산의 부족
  - 기관장과 공무원, 주민들의 무관심
  - 지방의회의 경쟁의식
  - 주민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 마을가꾸기 사업 등 공동체 복원사업과의 연계 미흡
  - 주민자치회와 지역유관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킹 미흡
  
-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김정희(2019)의 분석에 의하면 주민참여의 다양성 확보와 숙의형 거버넌스 형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도시재생과 관련한 교육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차원의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임. 또한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고지영·황규홍 2017)

- 무엇보다, 새정부의 공동체정책 중 주민자치와 관련한 내용을 고려할 때, 향후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 도시재생 등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결국 자주재원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운영한다거나 주민교육을 실시하게 될 가능성이 커져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2. 교육 콘텐츠의 문제

- 교육 콘텐츠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응답자들은 민간의 자율 역량 강화와 주민 특성을 고려한 교육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배봉호(2014)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의 지적을 하고 있음. 민관협력과 협치를 위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참여와 주민주도를 유도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난다는 것임
  - 주민교육이 관 주도로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주민을 위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제도적인 기반이 취약함
  - 문화예술,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인근 주민자치센터, 개인사업자 등과 중복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소외계층, 가족 등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부족함
  - 지역리더로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현안 토의, 지역공동체 만들기, 주민주도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조직 연계 등의 활동을 하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주체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며 전문성 또한 부족함
- 비슷한 맥락에서 도시재생교육 역시 지역별 주민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커리큘럼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김도연·유재우 2016)

### 3절. 주민교육 개선 방안

#### 1. 제도 운영의 개선 방향

##### 1) 실질적 정책 결정권 부여

- 모든 참여에 최종적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힘들지라도 적절한 권한 부여가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임. 예를 들어 피드백 효과가 떨어지는 자문위원회 참석은 결정 권한을 갖는 참여 형태라고 볼 수 없음. 주민들이 자신의 참여에 따른 변화의 경험이 실질적인 적극적 참여를 유발하는 동기 부여 방안이 될 것임
- 일부 지자체에서 참여포인트제 운영을 통해 경제적 보상을 통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유인하고 있음. 이는 참여의 횟수에 따라 자원봉사 점수와 같은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것임.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보상보다는 실질적 권한 부여가 참여자들의 자긍심 획득을 통해 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음(홍수만 2019)

##### 2) 주민참여제도의 네트워크화

-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주민의 참여 통로 확보를 위해서는 마을을 기반으로 한 기초생활 단위에서의 주민총회나 지역회의 등을 통한 직접 참여가 필요함.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와 같은 기존의 마을조직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윤성일 외 2022)

##### 3) 전자참여 활성화

-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이(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해 2022년 2월 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함. ‘주민이(e)직접’은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처리한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컴퓨터(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플랫폼임. 이 플랫폼에서는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거나 청구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도 할 수 있음. 또한,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해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의 제고로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됨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모두 수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하며, 주민참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논의 시간을 부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플랫폼(platform)의 구축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있어서 전자 참여(e-participation)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함(윤성일 외 2002)

## 2. 교육 콘텐츠의 개발

### 1) 수요자 중심의 주민교육 콘텐츠 개발

- 주민교육은 일방적인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학습수요자 중심의 접근방식이 필요함. 가족형태의 다양화, 정보화시대, 그리고 길어진 생애 단계 등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로 주민의 실생활이 오히려 정책을 앞지르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습자의 욕구에 맞는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발굴과 추진이 무엇보다 필요함(배봉호 2014)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주민의 역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됨. 이를 위해 실질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이 있음. 또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과 참여의 적

극성 확대를 위한 사전교육 역시 필요함.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문제 선정 및 해결방안 결정과정에 주민의 의견 반영 비중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같은 맥락에서 교육의 내용 역시 관 주도가 아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교육목을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수요자 중심의 주민교육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교육모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표 4-1] 거주 형태를 고려한 주민교육 모델**

|    |           |
|----|-----------|
| 도시 | 집단(아파트)거주 |
|    | 일반거주형     |
| 농촌 | 읍         |
|    | 면         |

- 위의 <모델1>은 거주 형태를 고려한 주민교육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참여 및 교육의 운영 면에서 도시의 집단거주형과 농촌의 읍 지역이 교육참여자의 모집과 네트워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을 상정한 것임
- 여기에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에 있어 기본(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두어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면 좋을 것임
- 아울러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교육 참여자가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수강자 참여형 교육방법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 2) 지역 리더 양성교육과정 실시

- 지역에 대해 고민하고 지역을 향해 뿔 수 있는 지역리더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리더 전문양성 과정이라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함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발굴과 운영, 학습자 활용, 학습자 간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내에서의 활동지원 등을 위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므로,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에서 주민의 학습설계를 지원하고 지역활동가를 발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전문가의 배치가 필요함(배봉호 2014)



## 결론

1절. 연구 요약

2절. 정책 제언





# 5장 결론

## 1절. 연구 요약

- 주민교육은 수단이며 과정이자 목표로, 학습은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도시문제의 새로운 해결방안으로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주민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학습으로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새로운 생활공동체 문화의 기폭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마을, 지역,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임
- 본 연구는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정치참여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까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함
- 2장에서는 주민참여의 발전과정, 주민참여예산제, 윤석열 정부의 주민 참여 정책 기조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봄
- 3장에서는 주민참여 교육 현황을 정리함. 주민교육의 유형과 특징을 정리하고, 주민참여예산제 교육과정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의 운영과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 또한 도시재생 교육과 주민자치 교육의 핵심 내용을 정리함
- 4장에서는 주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제도운영과 교육 콘텐츠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봄

## 2절. 정책 제언

-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주민교육제도 운영 방안으로는 주민들의 정책결정 권한 강화, 주민참여제도의 네트워크화,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주민교육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지역 리더 양성교육과정의 실시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신정부 출범에 따라 민간 자율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 부응하는 주민 참여 제도나 정책 개선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제도 및 정책 실현을 위한 새로운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임
- 이는 자율 역량,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자는 취지임. 일자리, 재난, 교통 등과 같이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갖는 분야에 대하여 영역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주민참여 제도 중심의 교육진행과는 달리 시정의 영역별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정책설명회 개최를 통한 주민참여 유도과 동시에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제도를 장기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함.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주민들이 성인이 되기 전부터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이를 실천하는 활동이 몸에 체득화되어 있을 경우 가능하기 때문임

## 참고문헌

- 고경훈 외. 201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연구.” 『한국행정논집』 24(2)
- 고지영·황규홍. 2017. “광역자치단체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도시재생교육 프로그램 한계점 및 개선사항 도출” 『한국주거학회춘계학술대회 논문집』제29권 제1호.
- 권자경. 2022. “자치분권 주민교육 영향요인과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지방행정연구』통권129호, 79-106.
- 김도연·유재우. 2016. “도시재생 교육 참여 주민의 지역별 선호특성, 『대학건축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제36권 제2호.
- 김재욱. 2018.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특성과 난점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14집 4호, 79-110.
- 김정희. 2019. “참여 및 숙의형 거버넌스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개선방안 연구.” 『NGO 연구』 14(3)
- 김홍주. 2020. “세종형 주민자치회 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부강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사례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4(2)
- 김홍주. 2021. 「세종시 시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 대전세종연구원
- 류영아. 2019.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 보고서 Vol.27.
- 배봉호. 2014. “자치시민으로서 역량강화 할 교육프로그램 절실.” 『월간 공공정책』 99
- 심익섭. 2003.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와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 학회보』8권, 85-101
- 윤성일 외. 2022.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권한 확장에 관한 연구: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3(1)
- 이정석. 2016. “[원도심 활성화와 주민교육] 원도심 활성화 역량 결집 위해 주민참여형 교육 반드시 필요해” 부산발전포럼 통권159호, 66-75.
- 이현국·김다니. 202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모색: 시·도 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30집 1호, 89-116.
- 전대욱. 2022. “윤석열 정부의 지역공동체 정책방향과 과제” 『지방자치정책Brief』한국지방행정연구원 145호.
- 최준렬. 2018.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정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27권 2호, 29-59.

- 전대욱. 2022. 「윤석열 정부의 지역공동체 정책방향과 과제」 지방자치 정책 Brief No. 145
- 전영평. 2022. “시민참여 역사를 통해 주민참여 자치를 성찰하다.” 『주민자치』 Vol. 129
- 정재한 외. 2019.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지방자치실무연구소. 1995. 『한국의 지방자치』. 서울: 의암출판
- 홍수만. 2019. “서울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제안.” 한국도시행정학회 하반기 발표 논문.
- 국토부. 2021. “도시재생 뉴딜교육으로 ‘성장하는 주민, 변화하는 도시’: 국토부, 도시재생 교육사례집과 교육교재 발간.” 국토부보도자료(2021.09.02.)
-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https://www.daejeon.go.kr/jumin/index.do> (검색일: 2022.08.20)
- 도봉구 주민참여예산. <https://juminys.dobong.go.kr/> (검색일: 2022.08.21)
- 부안군 평생교육. <https://www.buan.go.kr/bale/index.do> (검색일: 2022.08.23.)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https://www.sejong.go.kr/yesan.do> (검색일: 2022.09.01.)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 17개 시도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 37(문지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08  
[www.dsi.re.kr](http://www.dsi.re.kr)